

원전 배출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되나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원전 지역 재난예방·환경개선 사업에 사용”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지 주목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영광 한빛원전.

제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

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

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은행, 대한조선에 운영자금 212억 지원

조선업황 부진·코로나19 위기 겹쳐

광주은행은 글로벌 조선업황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조선에 운영자금 212억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은행의 이번 운영자금 지원은 대한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지급보증했고, 현재 선박 20척을 건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오는 8월에도 2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전체 지원규모는 422억원에 이른다.

1987년 9월 설립된 대한조선은 전라남도 해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외에 중형 탱커선 등 선박을 수주· 건조하는 업체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수혈해 기업 운영을 원활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아이가 머리 아프다는데 확인증 받아오세요”...학부모는 냉가슴 앓이

학교 측 코로나19 적극 대처로 확인서 제출해야 등교 가능



22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중학교에서 북구청 보건소 방역반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하고 있다.

“아빠님!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일단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오셔야 해요.”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 중 하나인 기침이나 두통을 호소할 경우 학교 측이 곧바로 학교조치와 함께 의료기관의 확인증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학부모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광주의 한 고교생 학부모 A씨(52)는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교조치를 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바로 학교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인근 병원의 선별진료소로 향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단순 편두통 등으로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A씨는 “학교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별일이 아니라 결론이 나면서 걱정은 덜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상이 있을 경우 학교를 하도록 하는 등 학교 측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고교생이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픈 곳도 많을텐데 그때마다 학교서킨다면 앞으로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B씨도 기침을 하는 고교생 아들을 데리고 광주의 한 보건소를 찾았다. 학교에서 보건소나 병원의 확인증 등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B씨는 보건소를 찾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B씨의 아이가 코로나19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기 보다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 확인증을 받는 데 더 빠르다는 설명했다.

B씨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업에 다시 들어가려면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했고, 짜증도 났다”며 “그때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거나 등교했을 때 두통이나 인후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학교에서는 보건소나 병원 선별진료소에 보내고 있다.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았거나 진료를 받았다는 확인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증을 받더라도 6시간 이상을 자가격리하는 등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받는 방법과 함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확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검사를 받으러 온 학생을 보면 고교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학부모들도 학생이 아프다고 하니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됐을까 하는 마음과 수업 등의 문제로 인해 걱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아직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 등도 이같은 사정을 말하면 대다수 이해는 해주신다”고 덧붙였다.

조인호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